

국가 개발 사업의 국제화

黃龍洙¹⁾

I. 배경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국제화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정 연구개발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처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도모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새해 업무 보고에서 밝힌 바 있고, 과학기술계에서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국제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들을 내 놓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살펴볼 때 연구개발의 국제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방향과 궤도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국제화를 진척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지 못한 느낌이 든다.

유럽의 중소 국가들은 자국이 가진 제한된 연구개발 능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벨기에는 EC Framework 프로그램, 유럽 우주기구, Airbus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자국의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기획하고 평가하며 국제적인 과학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국의 과학기술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들 유럽의 중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연구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의 제약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제화의 확대 그 자체로만 의미를 찾을 수는 없으며 국제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아직은 국제화의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어떤 성격의 연구개발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서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한 대안의 모색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킬 기본 시각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국제화의 정책 기초, 국제화의 요소, 국제화의 전략 등의 측면에서 우리 나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국제화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II. 국제화의 정책 기초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는 일차적으로 지난 12월 Uruguay Round(UR)의 타결로 등장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가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제한하는 등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을 명시하면서 비롯된 밖으로부터의 요구에서 점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한 경쟁이라 불리워질 만큼 냉엄한 국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있는 과학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안으로부터의 요구가 그 밑바탕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국제화는 우리의 연구개발 사업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소극적 측면과 더불어 연구개발의 울타리를 세계로 확대시켜 나가는 적극적 측면도 동시에 고려되어 그 정책 기초를 찾아야 할 것이다.

가. 국제 규범 이행을 위한 국제화

미·소 양국 체제하의 냉전이 종식되고 경제적 실리를 우선으로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동은 세계화 추세로 치달고 경제적 이해는 블록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UR타결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제한과 지적 소유권의 보호 강화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명시하고있고, 앞으로 OECD를 중심으로 이

러한 과학기술 규범이 보다 구체화되어 소위 Technology Round(TR)로 발전할 가능성을 짚고 있다. 이와 더불어 CFC 사용 규제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등 각종 국제적인 환경 조약에서 환경 의무가 강화되어 조만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술의 사용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Green Round(GR)의 등장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규범들은 앞으로 '신국제 기술 질서'의 모태가 되므로 이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같은 중진국이나 개발 도상국의 산업과 과학기술에 커다란 타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강요된 국제화이긴 하지만 우리도 '협력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제적인 게임 규칙에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보조금을 수단으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이러한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검토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 하나는 현행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도가 국제 규범에 저촉되는지를 살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으로 정부 역할의 재조정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나. 세계 일류 수준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화

과학적 지식의 활용과 기술적 적용 능력의 향상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독창적인 과학기술의 창출 능력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국제적인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과 연구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 일류 수준의 연구개발을 이룩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세계 일류 수준을 추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현재 세계 일류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나 아직 신생기술(emerging technologies) 분야로서 장차 세계 일류 수준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찾아내어 과감한 국제화를 통하여 국내에 연구개발의 탁월성 집단을 육성하고 외국의 연구개발 탁월성 집단과의 연구 협력을 활성화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보호주의와 지적 소유권 보호의 강화로 첨단 기술의 획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최신 과학기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최신 과학기술 정보 수집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과학기술 정보의 중심지에 연구 활동의 거점을 설정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화

과거 노동력과 자본 동원에 의존하던 경제성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해 국가 경쟁력 의 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제화를 통하여 우리의 기술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워 나가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의 국제화가 경쟁력의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과학에 바탕을 둔 기술의 생성이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취약한 자체 연구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원천 기술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국제화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환경 산업, 지식 산업 등 지구 규모의 도전과 기회에 관련된 신산업군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장래 미래 산업 구조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국제 경쟁의 전면에서 서게 될 신산업군의 기술적 발아와 성장을 돕기 위해 신생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 선도국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III. 국제화의 실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국제화는 1985년부터 특정 연구개발 사업 재원 중 일부를 국제 공동 연구 사업에 투입하면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선진 기술의 습득에 주력해 왔다. 그 동안 주로 선진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554개 과제에 305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1993년도에는 계속 과제인 44개 과제를 포함하여 71개 과제에 대하여 44억 4천 만원의 연구 협약이 체결되어 현재 연구가 수행 중이다.

그러나 국제 공동 연구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방문 차원의 인력 교류가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공동 연구가 수행되지는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폴란드와 헝거리와의 협력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단독 지원에 의해 국내 연구자의 관심 분야 중심으로 과제가 발굴되어 협력 상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국제 공동 연구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산업 기술과 제품 개발에 초점을 두면서 과학적 지식의 발견에 주안점을 둔 선진국 협력 상대의 관심과 더욱 유리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대형 전략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계획된 기간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술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연구를 외국에 맡겨서 수행하거나 국제화를 통하여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는 방안을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서는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과학기술처가 지원하는 4개 선도 기술 개발 대과제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총지원액 약 700억 원 중 약 20억 원 정도만이 국제 공동 연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KIST를 포함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국제적인 인력 교류는 비교적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1개월 이하의 단기 방문이 대부분을 차지해 실질적인 공동 연구는 차지하고 최신 과학기술 정보 획득도 용이치 않은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원인은 외국인 과학자를 장기 유치할 수 있는 재원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표 1>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국제적인 인력 교류 현황

구분	외국인 전문가	국내 연구진 파견
1개월 이하	548(94%)	227(75%)
2~3개월	17(3%)	39(13%)
4~6개월	6(1%)	7(2%)
7개월 이상	12(2%)	30(10%)
계	583	303

주: KIST, 기계연, 해양연, 유전 등 4개 출연 연구
소의 93년 통계 자료

자료: 김은영, "출연 연구소의 대외 개방 및 국제화",
STEP[국제화 전략 심포지움, 1993. 12. 28

IV. 국제화의 요소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국제화를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국제적으로 추진

하는 데 따른 제반 요소가 국제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 조건이라고 하겠다.

가. 사업의 내용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내용을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획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도 기술 개발 사업과 같이 장차 국제적인 경쟁을 염두에 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국제적인 수준에서 크게 뒤떨어진다면 사업의 의미 그 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국제 규범의 이행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UR과 GR의 규범에 비추어 현행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이에 부합되는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UR 최종 타결안에 따르면 특정성이 있는 연구 보조금 중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업 연구(industrial research)에 대해서는 총연구비의 75% 이내, 상업화 이전의 경쟁 전단계 개발 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ies)에 대해서는 50%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UR 규범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 보조금을 수반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이 경쟁 전단계 개발을 넘어서 UR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개발 단계에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공업 연구나 경쟁 전단계 개발 활동이라도 현행 정부 보조금의 지원 비율이 UR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UR 타결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업 연구와 경쟁 전단계 개발의 포괄 범위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WTO 출범 이후 18개월 이내에 제시될 보다 명확한 해석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나, 전략 분야의 산업 기술의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우리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상당 부분 이러한 규범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대과제 내의 기초 연구로부터 개발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단계의 연구개발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연구개발 성격을 대과제 수준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대과제 내의 종과제 또는 소과제 수준에서 연구개발 성격과 정부보조금 지원 비율의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우리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의 성격을 당장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 중심의 사고로부터 연구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이에 따라 연구 과제의 명칭도 '--- 개발'이란 프로젝트 명칭에서 '--- 연구'라는 명칭으로 서서히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UR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예 기간 동안 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정책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 전환은 가능한 한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CFC 등 각종 국제적인 환경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 사용을 수반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에너지 절약형 기술 등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 규제가 최근에 강화되기 이전에 기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들을 재검토해 부적합한 연구에 연구 자원을 투입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나. 연구 수행 주체

연구 수행 주체의 선정에 있어서 국내 연구 수행 주체뿐만 아니라 외국의 연구 수행 주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능력의 동원 가능성을 해외로까지 확장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내 연구 수행 주체의 근간을 이루는 대학, 정부 출연 연구 기관, 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국제화는 이들 연구 수행 주체의 국제화와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내용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하자가 없고 손색이 없다 할지라도 연구 수행 주체가 국제화를 이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국제화는 그야말로 구호에 그치고 말지도 모른다.

연구 수행 주체의 국제화 이행 태세 가운데 외국의 교육 연구 기관과 국내 대학간의 과학자 교류 개방, 외국 과학기술자와 정부 출연 연구 기관간의 실질적인 공동 연구 기반 구축, 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컨소시움에 대한 국제적 참여와 개방 등이 특히 국가 연구개발 사업 국제화의 실효성을 진행시키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다. 관리제도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료제적 통제는 국제화를 지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연구 수행 주체가 개방된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및 보수 체계의 유연성을 부여해 나가야 하며, 그리고 연구비 사용, 외국 연구소에 대한 연구비 출연, 연구성과의 귀속 등 과 관련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제화를 통하여 연구개발의 속도를 가속화 시킬 수도 있지만 국내 연구에 비해 국제 공동 연구는 상당한시간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국제화가 수반하는 공간적 제약에 따른 시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선정과 집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화해야 할 것이며, 프로포잘 신청과 보고서도 별도로 마련된 절차에 따라 국제적인 언어인 영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제도의 정비를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관련된 현행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이미 국제화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 연구개발 자원

과학기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을 과감히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과학기술 인력이 국제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에 뒤지지 않도록 주기적 해외 연수 기회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특히 외국의 우수 연구자가 비교적 장기적으로 국내 연구 기관에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Brain Pool 제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국내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정보의 국제화는 세계일류 수준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될뿐만 아니라 국제화의 대상과 파트너를 찾는 데도 필요불가결하므로 국제적인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되는 광범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국제화는 연구 수행 주체들이 이러한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국제화의 파트너와 쉽게 연결될 수 있어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V. 국제화의 전략과 추진 방법

가. 국제적 차원의 경쟁을 통한 연구개발 효율화 도모

외국의 우수 연구 집단이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기회를 대폭 개방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질을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끌어 올려 나가도록 한다. 특히, 국제적인 과학기술의 조류에 긴밀하게 접하고 있는 해외 거주 한인 과학자들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에서 뿐만 아니라 기획과 평가에서도 폭 넓게 활용함으로써 연구 수행의 기대 성과에 대한 기표로 삼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데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국가적인 기술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국 연구자에게 참여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출연(연) 사업을 포함한 국책 연구 개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의 경쟁적 전략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특정 애로 기술의 문제 해결

선도기술개발 사업과 국책 연구 개발 사업 중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정 애로 기술에 대하여 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술 탁월성 집단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우수 과학기술자를 국내에 상주시키면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초연구는 국제 협력이 쉬우나 응용 연구 단계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연구 협력이 어렵고 기술의 개발 단계에서는 기업 차원이 아닐 경우 국제적인 연구 협력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 애로 기술의 문제 해결을 국제적인 연구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 상대를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협력의 목표를 뚜렷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예상되는 특정 애로 기술이나 전략적 기술 분야의 기술 축적을 위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연구원을 Post-Doc 제도 등을 활용하여 그 분야에서 탁월한 외국 연구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임무 지향적(mission-oriented) 기술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별 1호의 성공적 발사에는 임무지향적 기술 연수로 영국에 파견되었던 청년 과학자의 기술적 성취가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 연구개발의 상승(synergy) 효과증진

기술의 복합화와 대형화 추세로 인해 특정 연구 주제나 어느 한 나라조차도 단독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어렵고 이러한 단독 연구가 효과적이지 못한 연구개발 분야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의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해 연구개발 능력과 연구 재원의 임계 규모(critical mass)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 보완성이 있는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는 공동 실험실 사용, 연구 조합 형성, 국제 협력의 파트너십(partnership)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적인 연구개발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 국제적인 연구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한 기술 능력 축적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내용 중 신생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의 국제적인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연계시켜 신생 기술 발전의 조류를 파악하고 기술 개발 능력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제5세대 컴퓨터 프로그램, 초전도 재료 연구, 지능 생산 시스템(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 IMS)연구, 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 창조 과학기술(Exploratory Research for Advanced Technologies : ERATO) 연구 등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Human Genome Projects, Global Environment Program, Space Station Freedom 등의 정부개발 프로그램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각종 EC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가속기 분야의 CERN 프로그램 등에서 국가간 연구 협력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상의 국제적인 연구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간 협력 협정에 의해 참여의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다. 특히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구 환경 연구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출범할 경우 상대적으로 참여의 기회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 국가간 산업 기술 협력의 촉매자적 지원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Technological alliances)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간 협력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 사업의 발굴, 협력 메카니즘의 형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최근의 한·미 산업기술협력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구상은 국가적으로 요청되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촉매자적 역할로 인식 될 필요가 있다.

VI. 맺음말

국가 연구개발의 국제화가 단기적으로 열매를 맺기는 쉽지 않으며,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제화를 통해 장래에 대비한 기술 능력을 축적해 나간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제화를 위한 대상 사업의 적절한 선정과 함께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국제화의 조건을 결정지우고 국제화의 토양을 이루는 연구개발 주체들이 국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과 개발성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제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중장기적으로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국제화가 시급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되 국제화의 목표를 우리의 연구개발 체제가 어느 단계에서는 보편적으로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에서 제시된 국제화의 요소에 대해서 단계적인 준비를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국제화를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주석 1) 정책연구 1실 실장, 선임연구원

